

經濟的 지배권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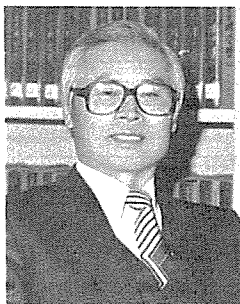
科學技術 앞선 나라가

전 세계에 걸쳐 근대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뚜렷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사실이다.

흔히 사람들은 1인당 GNP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려내는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인당 GNP의 크기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커다란 격차가 무엇때문에 발생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려내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요인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 수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땅덩어리나 인구의 크기가 그 나라의 국력의 크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땅덩어리나 인구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인도나 중공은 아직도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국토면적이나 인구가 이들 나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서구라파 선진국이나 일본은 누가 무어라 해도 선진국임에 틀림이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선진국에서는 인구 1인당 생산성이 높고, 후진국에서는 그것이 낮다.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이와 같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과학과 기술의 수준에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생산되는 물건이 후진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후진국에서 생산된다 해도 생산비가 많이 먹히어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값싸게 먹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일단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생산력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선진국은 가급적 오랫동안 자기들의 유리한 입장을 지키면서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안간 힘을 쏟기 때문에 후진국은 여간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렵게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경제의 환경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



朱 宗 桓

(東國大 교수 · 經濟學博士)

전이 끝나자 국제경제는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IMF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 덕택으로 세계의 교역량이 눈부시게 확대되었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각국이 경쟁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IMF 체제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들이 18 식민지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정세 아래서 여전히 경제적 지배권을 유지해 가는데 매우 편리한 국제경제 질서였다는 사실이 이제와서는 매우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듯 하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피땀어린 노력으로 겨우 몇몇 산업분야에서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선진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선진국들은 이제 자유무역주의의 깃발을 내던지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서 수출자유규제나, 덤핑관세나 하여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근자에는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여러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에 대한 특허료 징수에 발벗고 나서는 등 과학기술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한 후진국 지배체제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형태만 다를 뿐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배력의 추구라는 점에서 IMF 체제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아래의 경제적 패권의 추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을 외국으로부터 헐값으로 도입해다 쓸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는 기술쇄국주의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제까지의 세계경제는 상품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여 왔지만 이제부터는 각국이 기술쇄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을 자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후진을 면치 못하게 되고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과학 기술의 진흥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민족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과학기술에서 앞선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지배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근대의 세계사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과학기술을 축적하였던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백년 이상이나 세계의 패권국가로 행세하였다. 제 1 차 대전과 제 2 차 대전은 그러한 영국의 패권에 대항하려고 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 후진 공업국들의 도전의 결과였다고 보아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漁夫之利를 얻어 새로운 기술적 선진국으로 부상하여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경제에 패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軍需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民需분야의 기술을 재빨리 축적한 일본과 독일, 특히 일본의 생산력은 점차 미국의 그것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미국과 일본, 미국과 구라파 선진국 사이의 무역마찰을 일으키게 하였다. 오늘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선진국 상호간의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에서도 궁극적으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역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사의 기본적 흐름을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단시일 안에 급조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의미도 바로 그런 뜻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광범한 수요가 없다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산물도 발붙일 곳을 잃거나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도 富益富 貧益貧의 경제, 대재벌 위주의 경제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이것과 더불어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성의 확립과 이를 위한 광범한 의미에서의 人間科學의 발전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선진조국 건설을 위한 과학계의 분발에 기대를 건다.